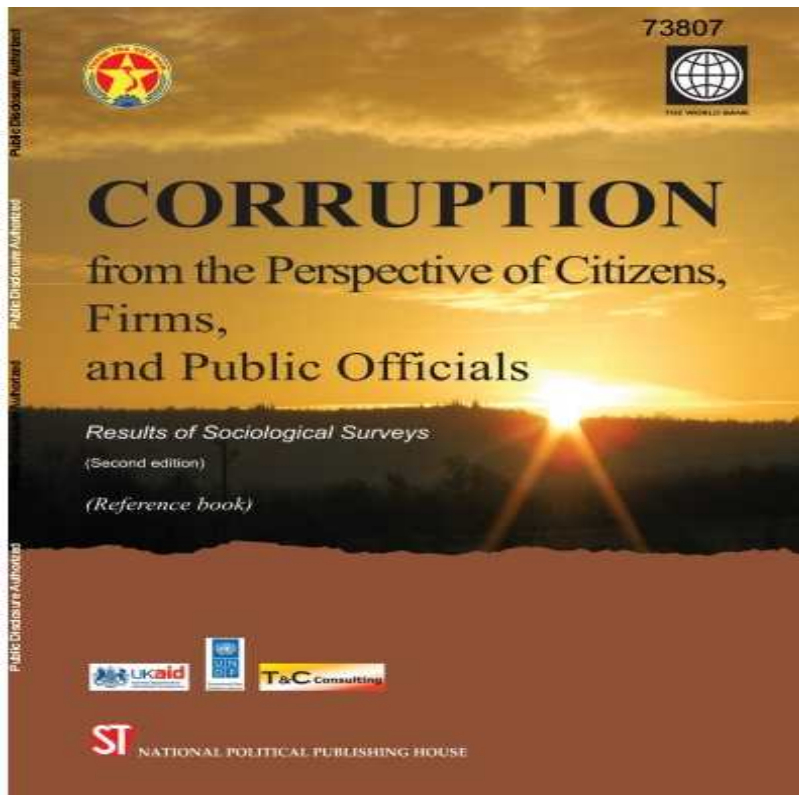


시민, 기업, 공무원 입장에서 본 베트남의 부패

하노이사무소



World Bank
사회 설문 결과 (2판)

< 설문 결과 >

- ※ 동 보고서는 하노이, 호치민, 다낭, 하이퐁, 껀터, 썬라, 하이중, 응에안, 투아 티엔 후에, 동탑 등 총 10개 지방/도시(총인구의 30%, 총 GDP의 65% 생산)의 설문 결과를 반영하였음.
- ※ 설문조사는 '11년 12월부터 '12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, 최종보고서는 2012년 11월에 출판되었음.
- ※ WB 베트남사무소는 '13년 6월 6Banks 정례 회의시, 설문 담당자를 초청, 본 내용을 공유하였음.

1 부패에 대한 인식

□ 부패의 특성

- 부패는 경제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국가에 존재
- 부패로 인해 행정 효율성은 감소, 공공지출은 비효율적
- 부패로 인해 법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, 국가의 명성이 떨어지며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
- 모든 사회 문제는 부패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패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음

□ 베트남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3가지

- 응답자 3명 중 1명 이상이 ①공무원 44%, ②기업 39%, ③시민 34% 부패를 선택함.

< 베트남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3가지(%) >

(단위: 백분율 %)

공무원	부패	일반 물가, 교통사고	양질의 교육
	44	38	34
기업	일반 물가	부패	소득
	54	39	34
시민	일반 물가	교통사고	부패, 식품안전
	44	40	34

출처 : World Bank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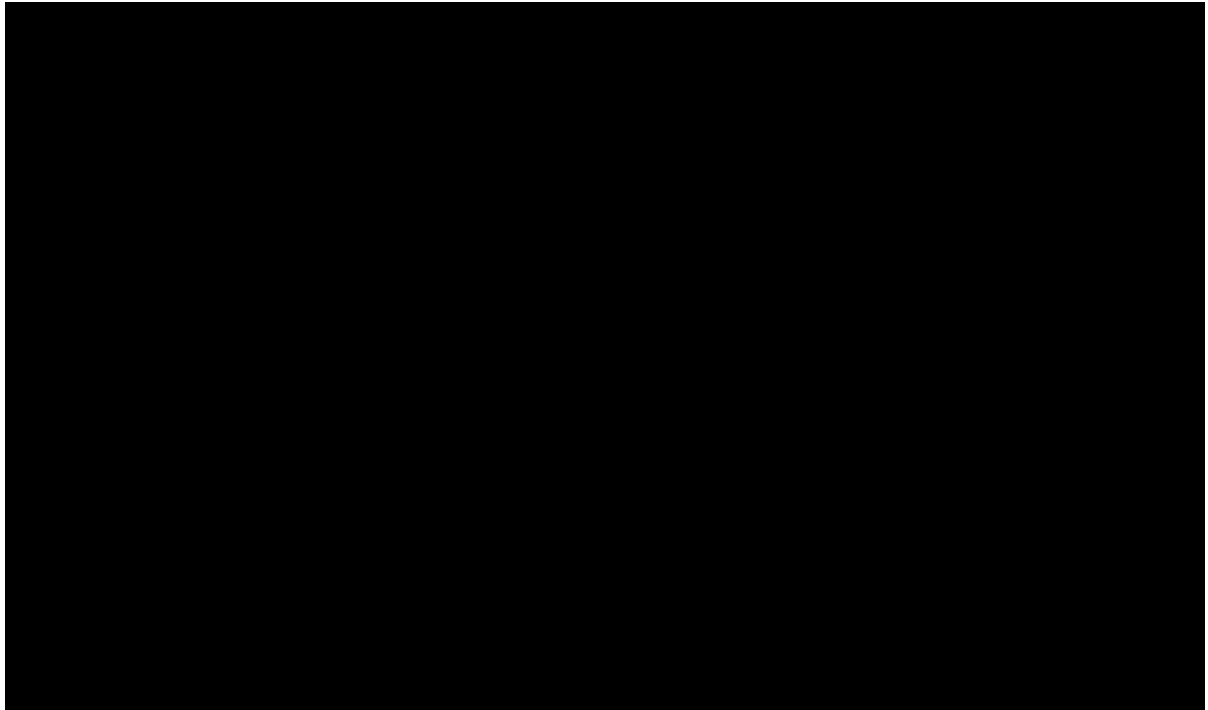
□ 지역별로 인식하는 부패의 심각성

- 소득층별로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, 고소득층의 경우 전국적으로 부패의 심각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으나, 사(commune)에서는 현저히 낮은 비율인 12%로 나타났음. 반대로 빈곤층은 전국적으로 다른 소득층에 비해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반면, 사(commune)에서 심각하다고 응답

한 비율이 23%로 소득층 중 가장 높았음. 이는 사(commune)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더 많기 때문으로 추측됨.

< 소득층별 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(%) >

(표 2-1)



□ 분야별 부패 인식도

- 75% 이상의 공무원,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부패된 분야로 교통경찰, 토지행정부, 세관 및 건설부로 응답하였고, 우편 및 통신부 그리고 미디어 분야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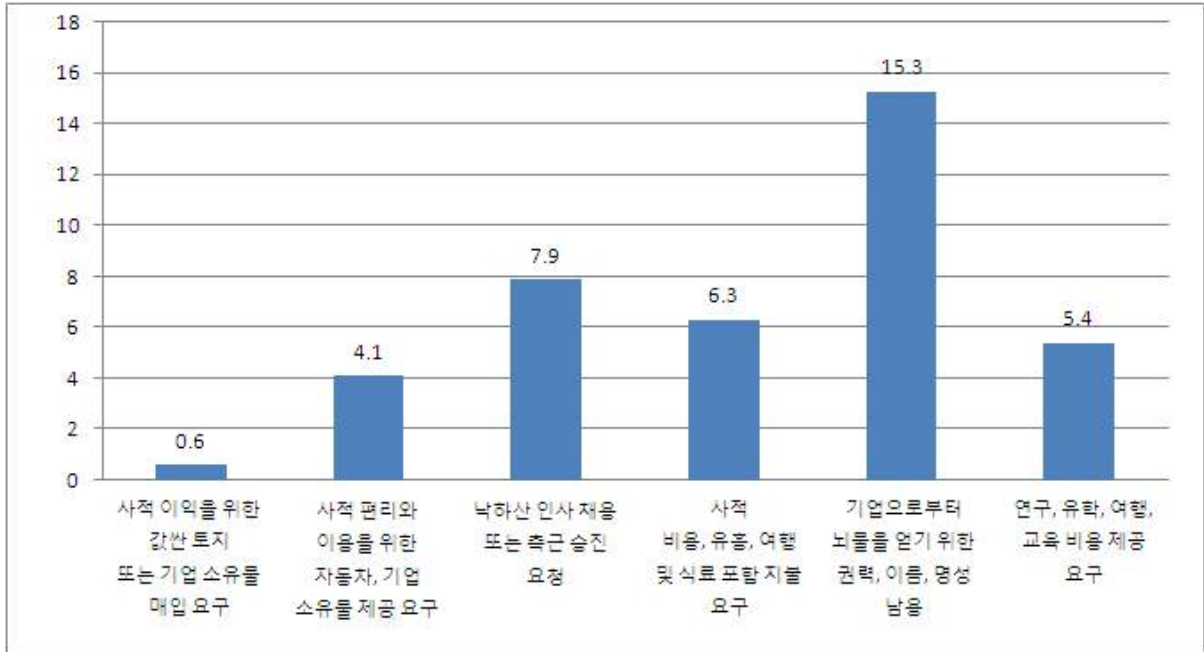
② 부패사례 분석

□ 기업들과 공무원간의 부패사례

- 지난 1년간 약 23%의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, 이 중 '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얻기 위해 권력, 이름, 명성 남용'이 가장 높은 15.3% 차지하였음.

< 기업들이 공무원에게 받은 요구사항(%) >

(표 2-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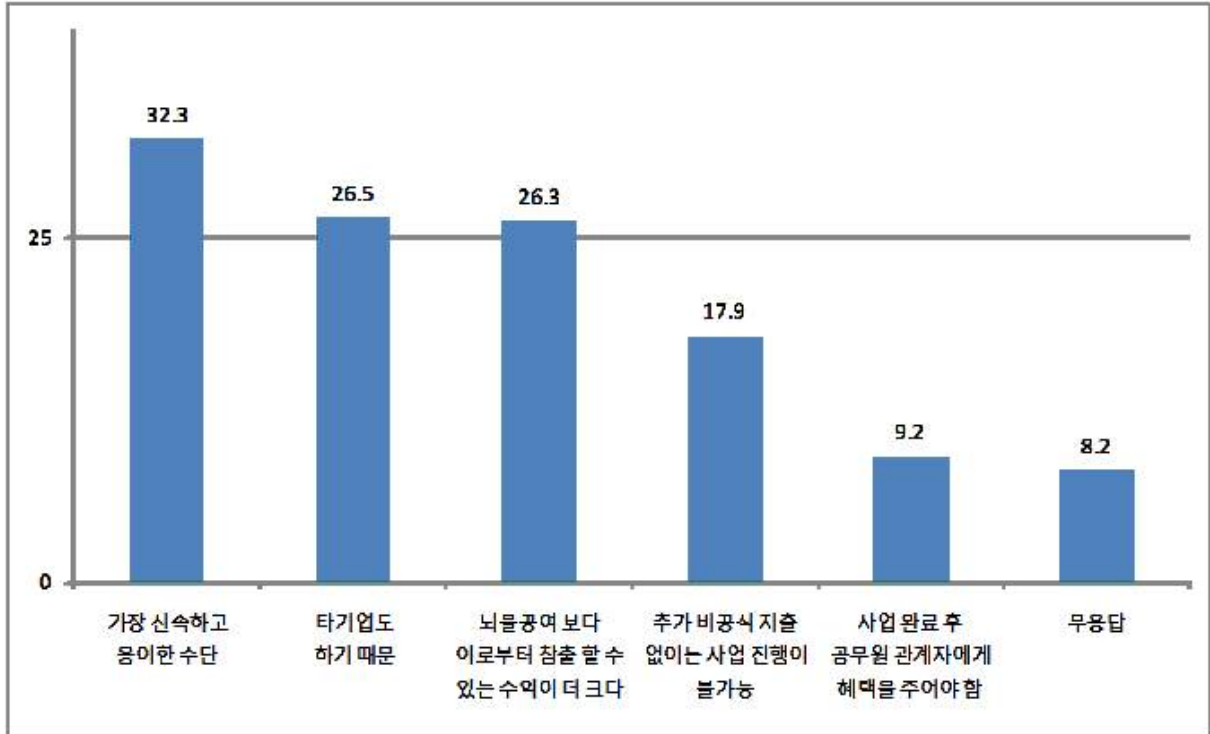


□ 기업들의 뇌물공여 이유 및 상대

- 정부기관 상대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에 대상기업 절반이 응답하였으나, 나머지는 사례가 없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답하였음.
- 응답자 63%는 정부기관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, 58%는 뚜렷한 해명 없이 공무원들이 조건을 문제 삼아 요구사항을 거절당하였고, 28%는 규정을 악용하여 압박당한 사례가 있었음.
 - ※ 상기 사례에 직면한 기업의 78%는 정부의 처리를 계속 기다렸으며, 86%는 정부기관에 항의함. 이 중 51%는 고위층에 도움을 요청하였고, 59%는 뇌물을 제공하여 해결함. 13%의 기업들만 법률 집행기관을 찾아갔으며, 6%는 통신사에 도움을 요청함.
- 기업들이 밝힌 뇌물공여의 대표적인 이유로 32%가 '가장 신속하고 용이한 수단'이기 때문이라고 함.

< 기업들의 뇌물공여 이유(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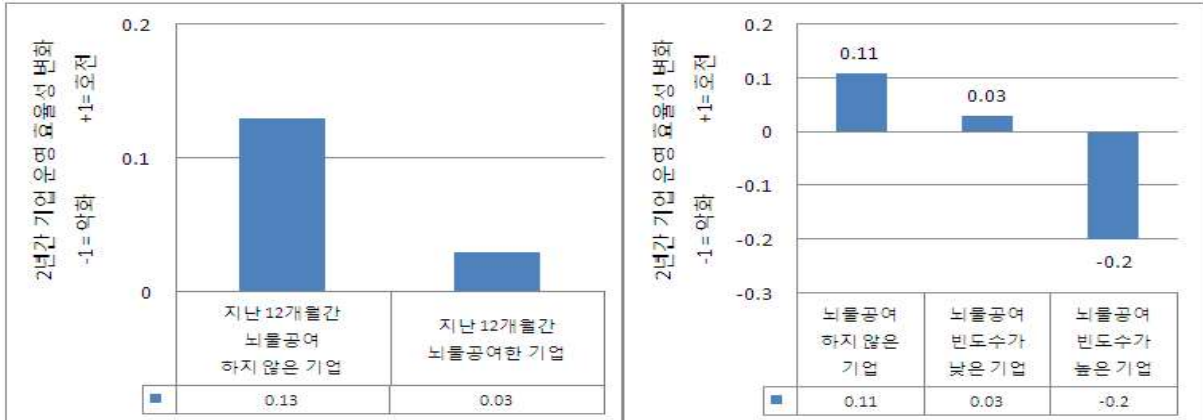
(표 2-3)



- 뇌물을 공여한 기업 중 60%는 그 비용이 과하다고 하였으나, 50%는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함. 또한, 37%는 직원들의 윤리 및 기업문화를 해친다고 응답했으며, 57%는 기업 간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함.
- 기업들의 뇌물공여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국세청, 세관, 교통경찰 등을 꼽았고, '가장 대표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관 3개' 설문 결과 국세청이 58%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두 번째로 높은 행정부(23%)보다 35% 높은 수치임.
 - ※ 상기 기관들이 받은 뇌물의 빈도 및 규모도 동일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하지만, 예상과는 달리 뇌물을 공여하지 않은 기업이 뇌물을 공여한 기업보다 실적과 성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빈도가 높아질수록 실적이 악화되는 현상을 보임.

< 뇌물공여 기업들의 실적 악화 >

(표 2-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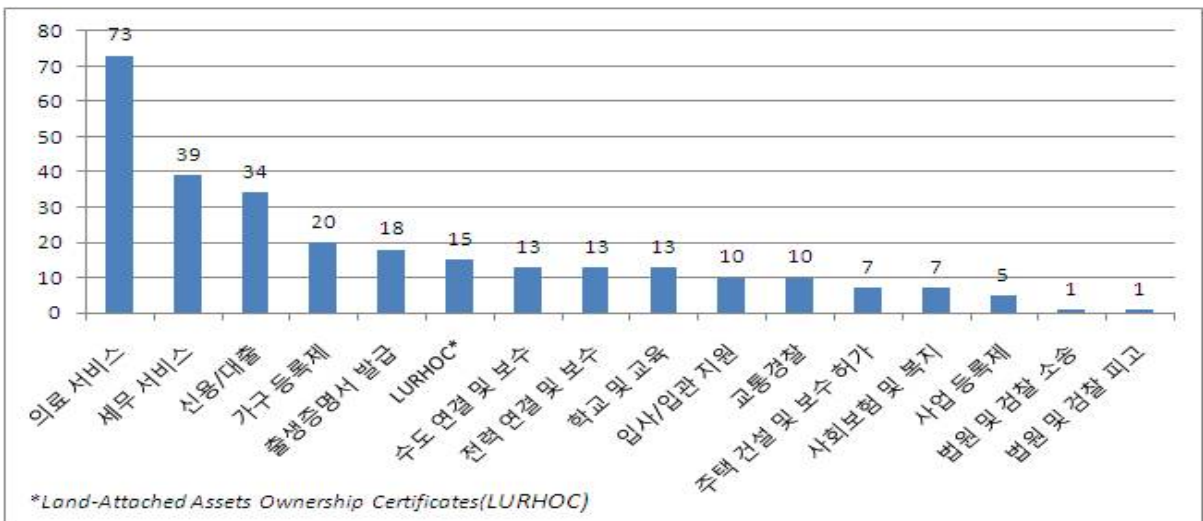


□ 시민들의 뇌물공여 사례

- 전반적으로 시민들과 정부기관의 접촉은 굉장히 잦은 것으로 나타났음. 75%는 의료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33%는 세무공무원 또는 은행 및 신용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음. 하지만, 법원 또는 검찰 기관을 상대한 시민의 수는 현저히 낮았음.
- 시민들이 정부기관과 접촉시 뇌물공여 확률은 교통경찰이 47%로 가장 높았으며, 학교와 교육: 30%, 기업/공무원 채용 시: 29%순이었음.

< 지난 12개월간 시민들이 사용한 기관 비율(%) >

(표 2-5)



< 정부기관 접촉 시 뇌물공여 확률(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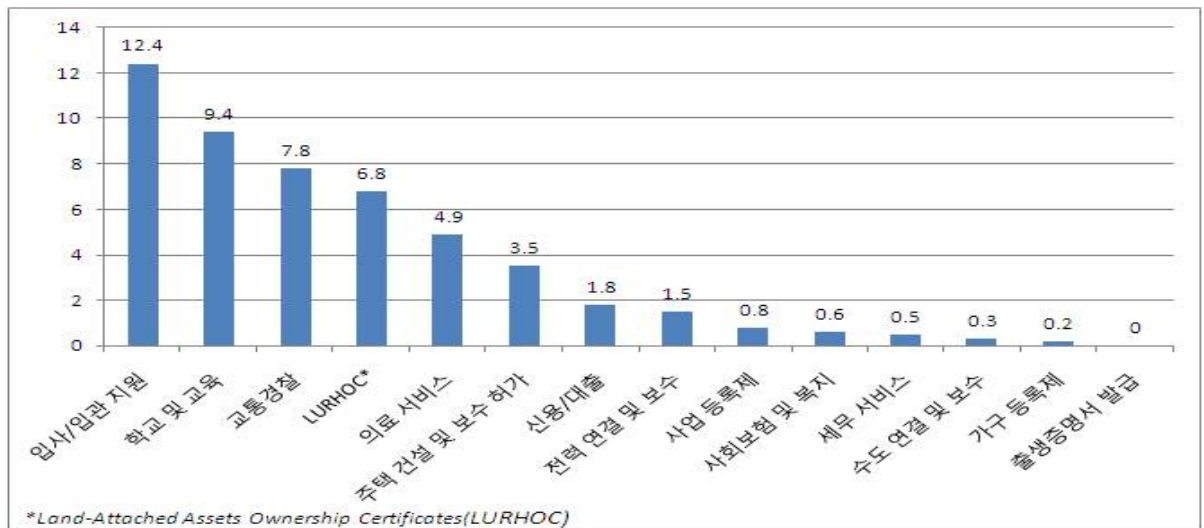
(표 2-6)



○ '거액의 뇌물공여 확률' 조사에서는 시민들이 공무원 채용, 토지양도 계약서(LURHOC) 신청, 그리고 교통경찰과 접촉 시 가장 잦았다고 함.

< 거액의 뇌물공여 확률(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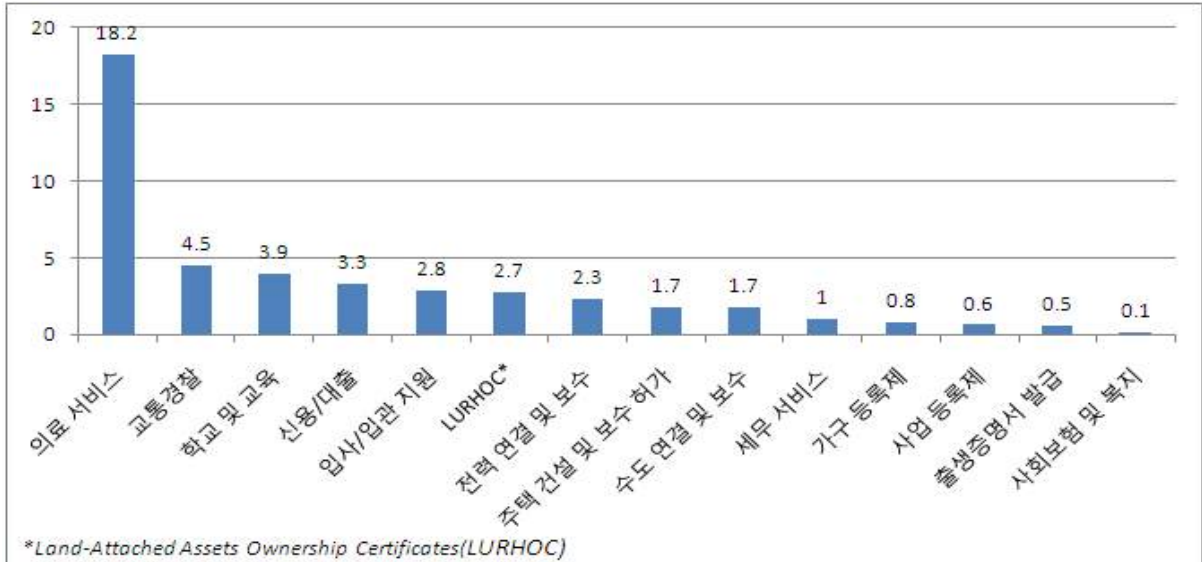
(표 2-7)



○ 확률적으로 교통경찰과 접촉 시 뇌물을 공여할 확률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인구가 각 기관에 공여한 뇌물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의료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.

< 전체인구 뇌물공여 비율(%) >

(표 2-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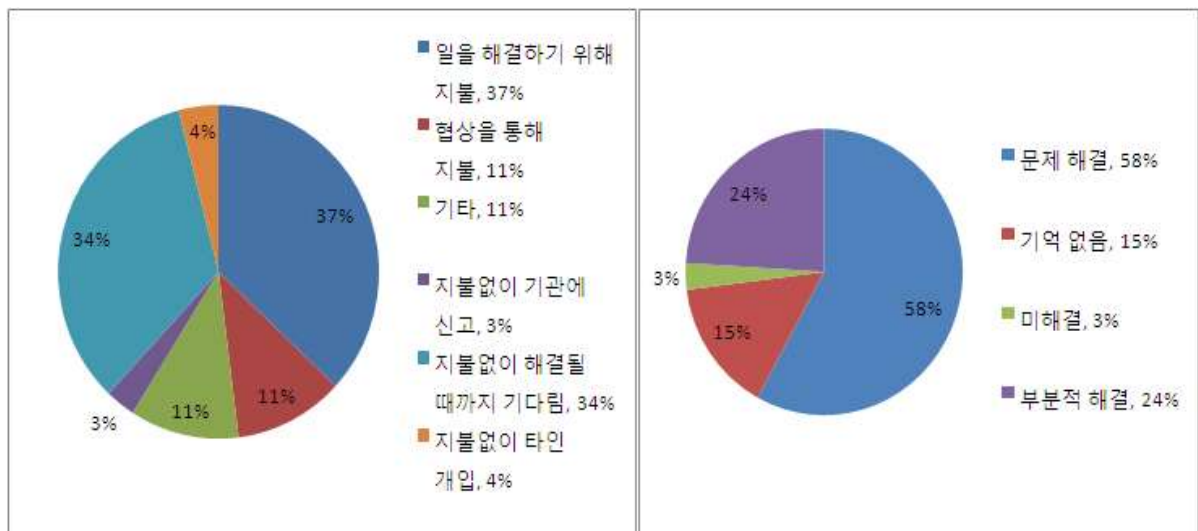


□ 시민들의 뇌물공여 이유

- 대략 50%의 시민들이 뇌물공여를 제시 받았을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하였고, 단 3%만 지불하지 않고 기관에 보고하였음. 58%는 뇌물공여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, 24%는 부분적인 해결을 보았다고 하였음.

< 뇌물공여를 제안 받았을 경우 시민들의 반응 및 효과성(%) >

(표 2-9)



* 왼쪽부터 '뇌물을 제시 받았을 경우 시민들의 반응', '뇌물공여의 효과성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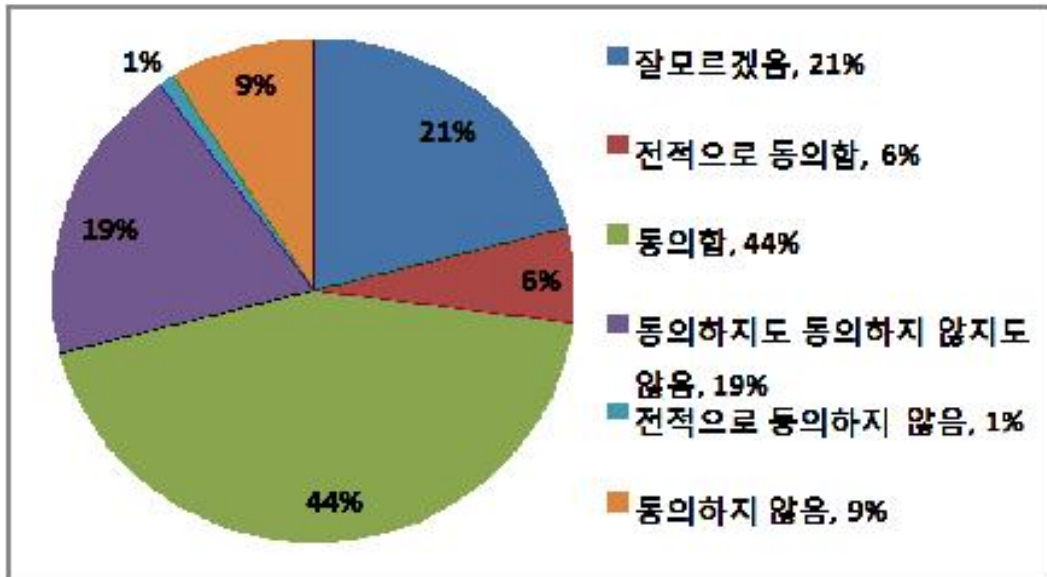
-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례로 '수도 관련 연결 및 보수'가 88%로 가장 많았으며, '세무'(83%), '의료'(76%), '교육'(74%), '전력 연결 및 보수'(73%)가 뒤를 이었음.
- 전반적으로 시민 21%는 자발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례가 한번 정도 있다고 답하였고, 대표적인 이유로 ①남들도 하기 때문(41%), ②감사의 표시(38%), ③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(32%)였으며, ④뇌물 없이 해결할 수 없음(17%)이 있었음.

□ 기업의 이익집단(Interest Group) 활성화

- 기존 부패가 정부 및 행정부패에 집중된 반면, 국가경제가 경쟁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부패의 형태도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음. 대표적인 예로, 기업들이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이익집단(Interest Group) 형성을 꾀할 수 있음. 대체적으로 이익집단은 기업들이 정책 기관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(37% 동의)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, 현재는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경제성장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도 지적 되고 있음.
- 이익집단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, 전반적으로 대기업과 기업관계자들은 이익집단 형성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 영향력을 강조했으며, 중소기업의 경우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쪽 다 함유하고 있다고 함.
- 한편, 이익집단은 베트남에서는 아직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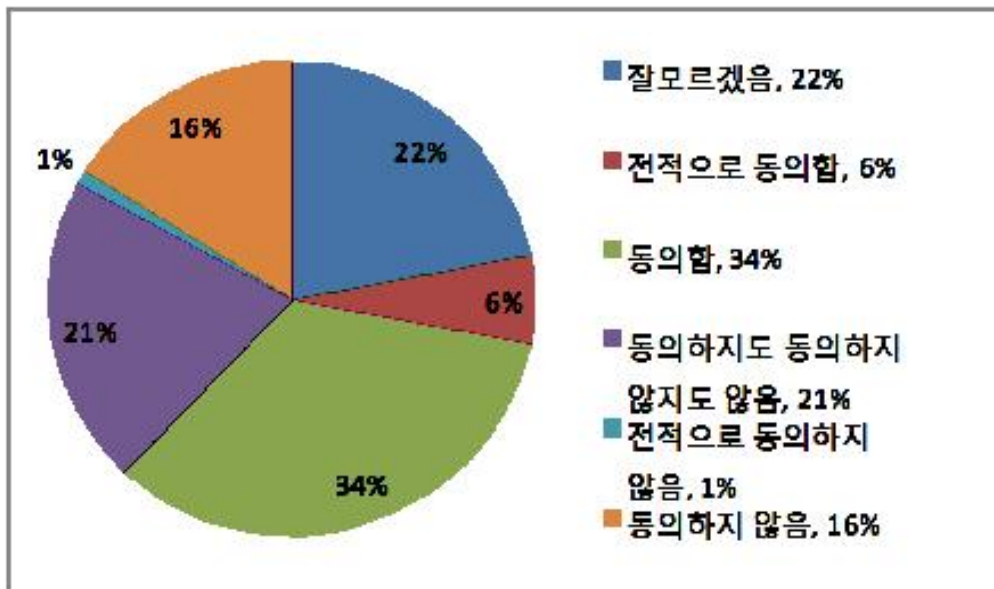
< 기업들의 '이익집단'에 대한 견해(%): ①영향력이 보다 크다>

(표 2-1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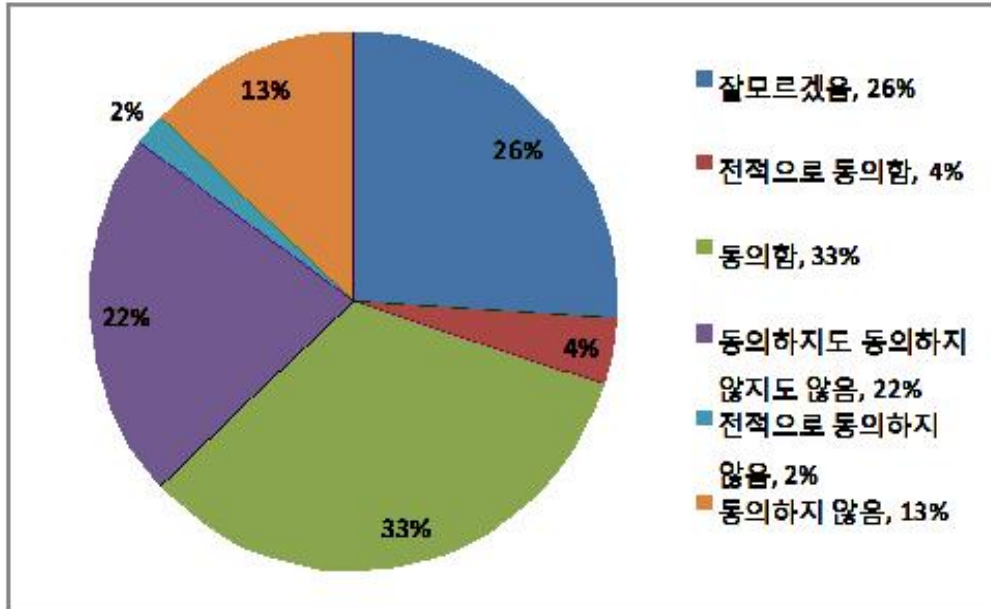
< 기업들의 '이익집단'에 대한 견해(%): ②인맥을 활용한 이익극대화 >

(표 2-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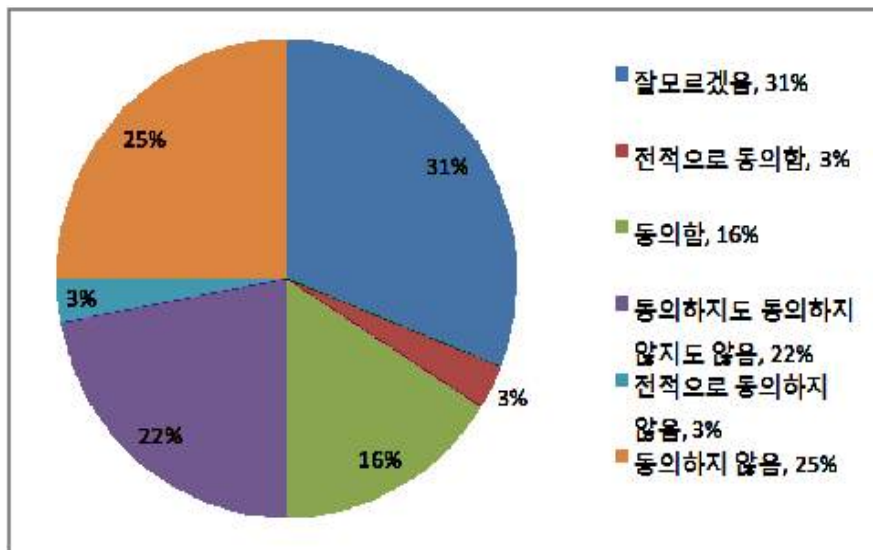


- '부패를 이용한 목적 달성'과 관련해 기업의 28%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40%에 가까운 기업들이 '인맥을 활용한 이익극대화'에 동의하였음(17% 동의하지 않음), 이는 심각한 우려로 지적됨.

< 기업들의 '이익집단'에 대한 견해(%): ③소통문제 해소를 위해 >
 (표 2-12)



< 기업들의 '이익집단'에 대한 견해(%): ④부패를 이용한 목적 달성 >
 (표 2-13)



③ 부패의 원인 및 대책

□ 부패의 원인: 기업, 공무원, 시민의 시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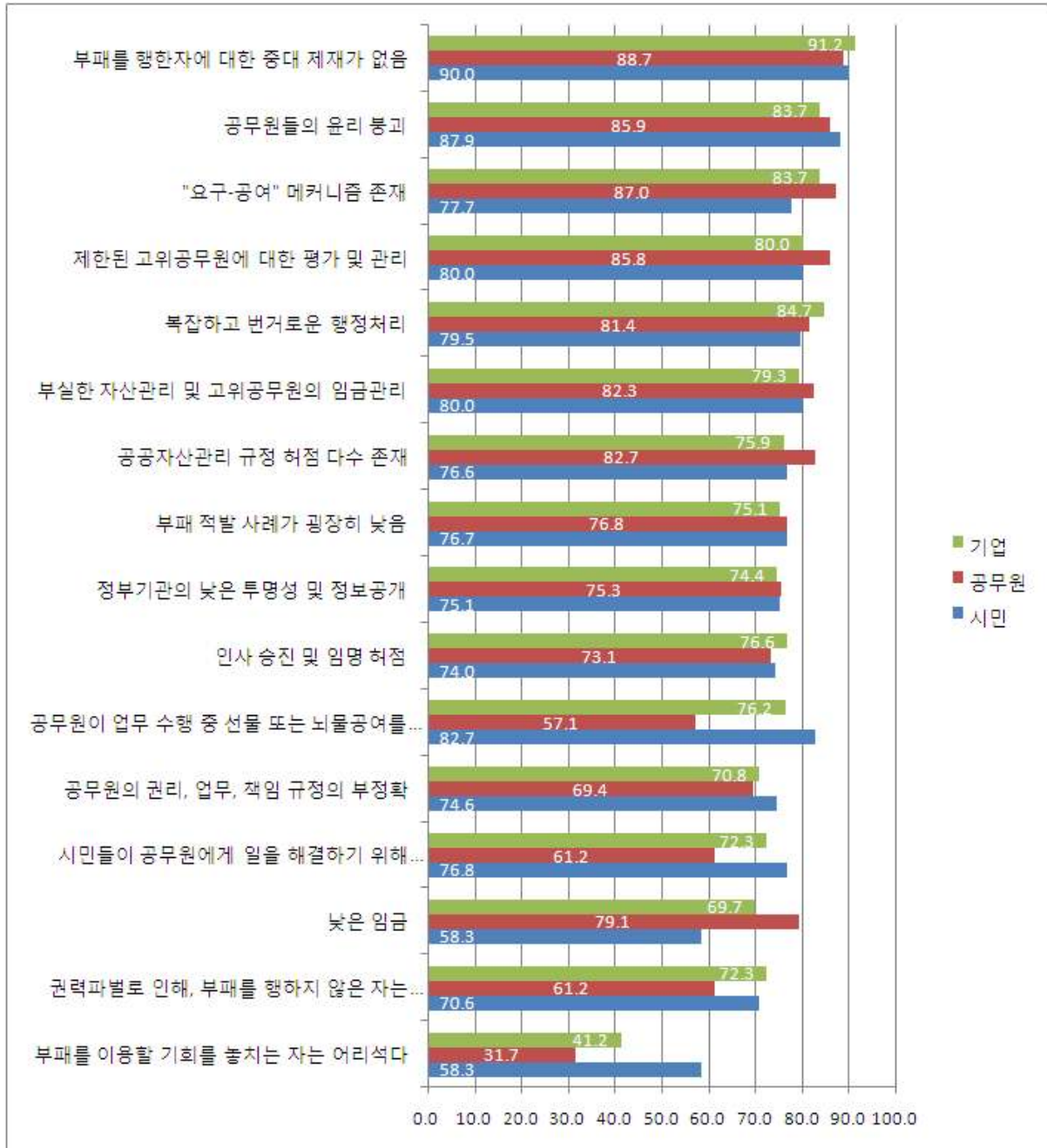
- 16가지의 대표적인 부패 원인 중 “부패기회를 놓치는 자는 어리석다” 항목을 제외하고 약 50% ~ 75%이상의 설문참가자들이 원인에 대해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였음.

※ “부패기회를 놓치는 자는 어리석다” 항목에 동의한 설문참가자는 50% 미만이었음.

- 설문참가자들이 공통으로 가장 공감한 항목은 “중대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” 이였고, 기업관계자 및 시민들은 공무원의 잘못된 습관이 주원인이라고 하였음. 한 예로, “공무원은 시민에게 선물 또는 뇌물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음” 또는 “시민들이 공무원에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을 관례로 여김” 항목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도가 기업관계자 및 시민들에 비해 많이 떨어졌음.
- 반면, 단 57%의 공무원만 “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선물 또는 뇌물공여를 받는 것은 관례다” 항목에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였고, 기업의 83% 및 시민의 76%가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였음.
- 공무원의 79%가 “낮은 임금” 항목에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전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한편 동 항목에 대해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58%만이 동의하였음.
- 특이사항으로는 시민 및 기업관계자보다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평가 또는 관리가 제한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규정의 허점이 주원인이라고 대답한 비율도 더 높았음.

< 부패의 원인에 대한 의견 (% 동의하거나 전적으로 동의) >

(표 3-1)



□ 부패에 대한 공무원 및 시민들의 대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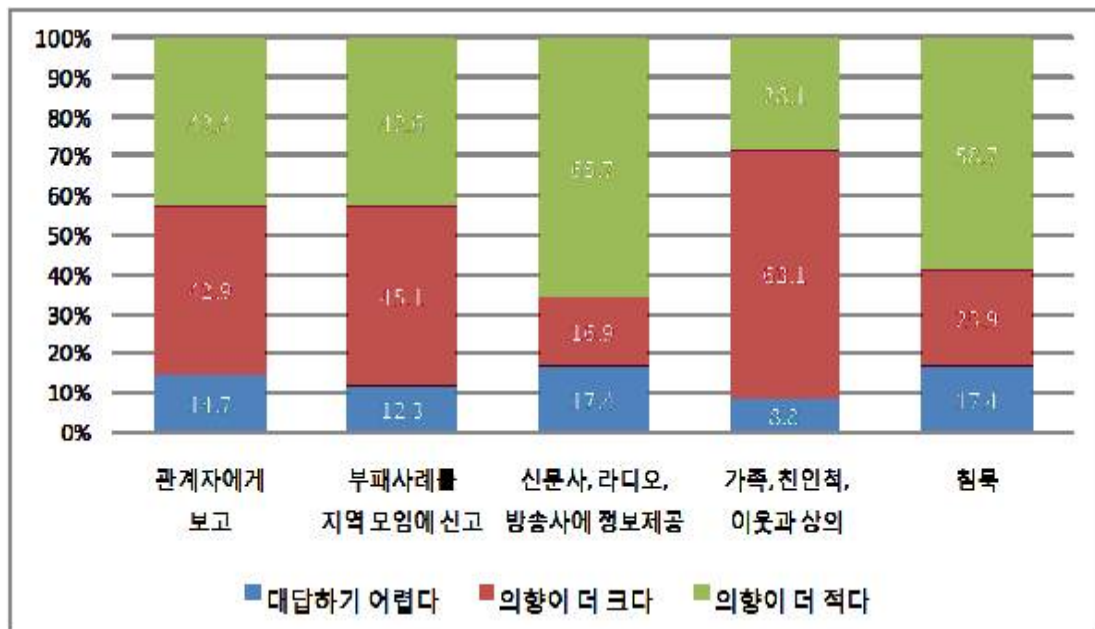
- 부패방지의 주요 목표는 부패 적발 시 신고의식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신고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음. 이를 위해서는 ①부정부패의

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야하며, ②신고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함.

- 설문조사 결과, 부패사태가 확실히 발견 되었을 경우 79%의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반면, 4%는 침묵한다고 하였음.
- 시민들은 '미디어에 정보공개'(66% 의향이 더 적다)보다 '친인척들과 상담'(63% 의향이 더 크다)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. 미디어는 부패적발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보임.
- 58.7%의 시민들이 부패 적발 시 침묵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,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은 고무적으로 판단됨.

< 부패적발 시 시민들의 대처 (%) >

(표 3-2)



□ 부패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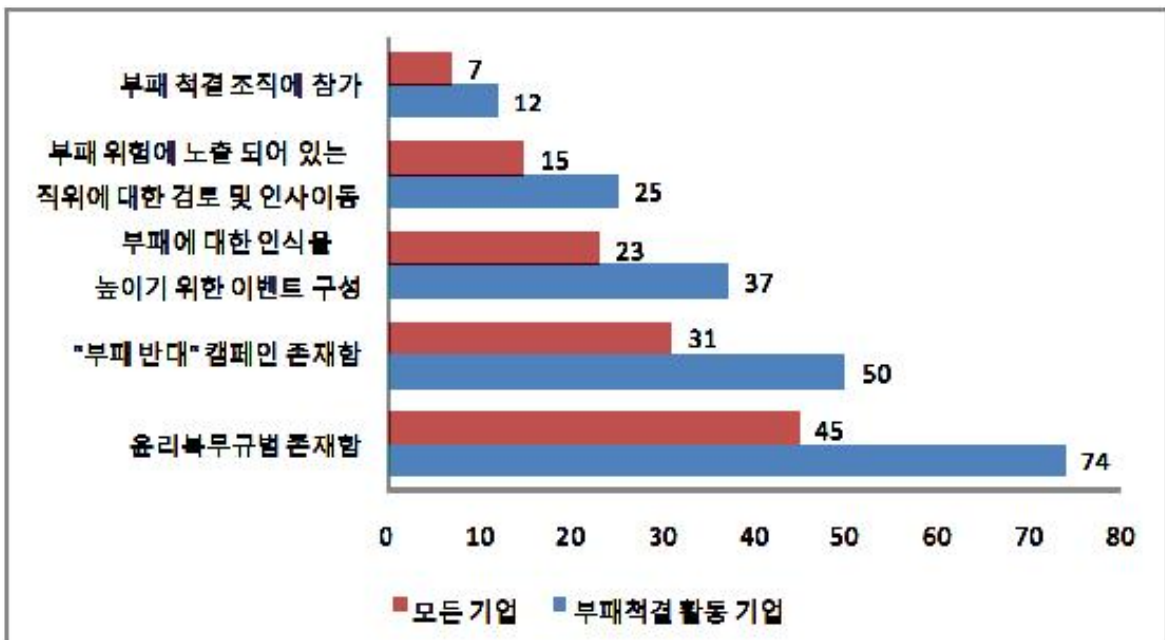
- 지난 1년간 52%의 기업들이 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펼쳤으며, 43%는 시행하지 않았음. 활동을 펼친 기업 중 74%가 윤리복무규범을 실시하

였고, 50%는 부패방지 캠페인을 열었으며, 37%는 부패인식도를 높이는 이벤트를 구성하였음.

- 부패인식도를 높이는 활동들과는 달리, 부패척결을 위한 '부패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직위에 대한 검토 및 인사이동', '부패척결 조직에 참가' 활동은 아직까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< 기업들의 부패척결 활동 (%) >

(표 3-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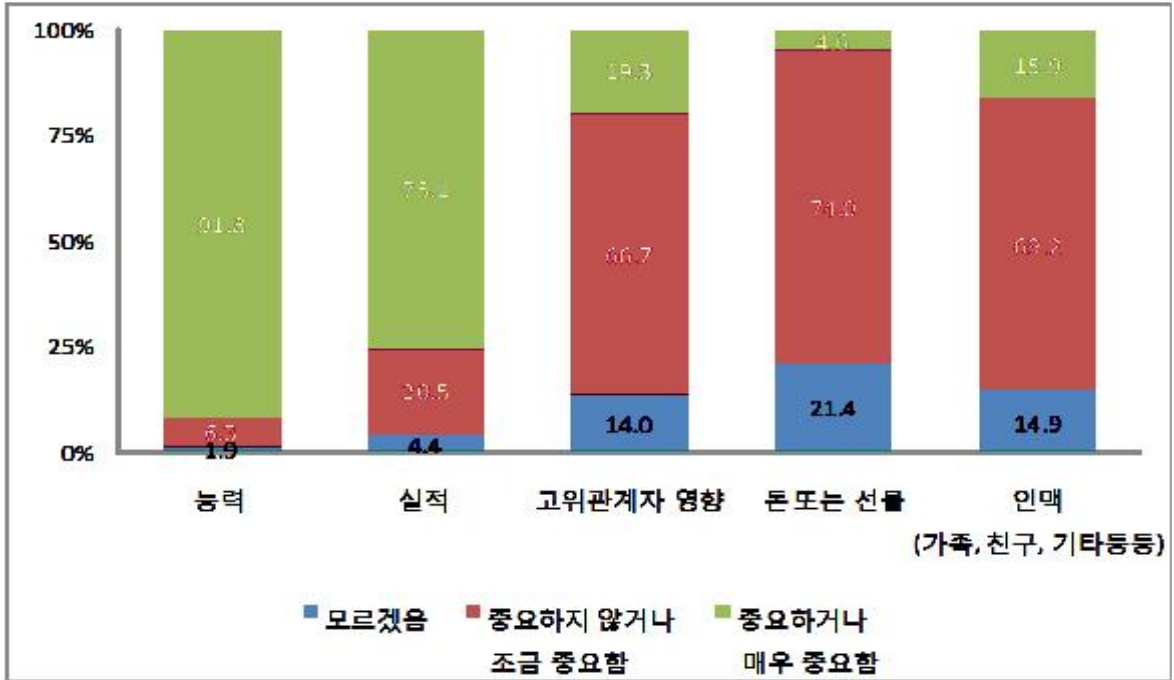


□ 공무원 채용 및 진급과 부패의 상관관계

- 공무원 채용 및 진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조사결과, 능력과 실적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. 또한, 고위관계자 및 친인척과의 인맥 작용을 선택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음.
- 소수의 설문참가자들이 '돈 또는 선물'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, '표 2-6' 및 '표 2-7'에 의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뇌물공여를 통해 채용을 희망하였기에 상반된 현상을 보임. 이는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된 후 뇌물공여를 통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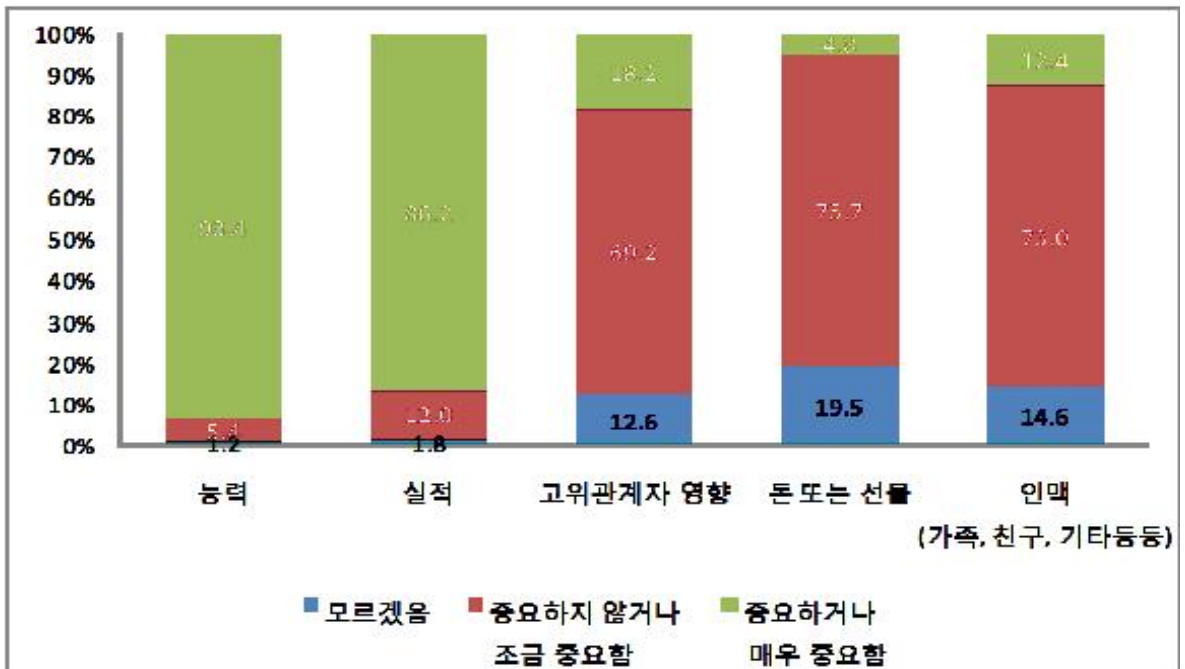
< 공무원 채용 시 중요 요소(%) >

(표 3-3)



< 공무원 진급 시 중요 요소(%) >

(표 3-4)



4 2005년(1차), 2012년(2차) 조사 비교

□ 가장 부패된 기관 조사 및 비교

- '가장 부패된 기관' 인식도 조사 결과, 2005년에 진행된 1차 조사와 2012년에 진행된 2차 조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였음. 1차 조사 당시 선정된 가장 부패된 기관 5개 중 4개는 그 순위를 2차 조사에서도 유지 하였으나 '공공재정부 및 세무기관'이 제외되고 공무원 및 시민이 선정한 '교통부' 그리고 기업들이 선정한 '광물자원관리부'이 5위로 새로 선정되었음.
- 관세기관의 부패가 가장 호전되었으나, 전반적으로 부패척결에 대한 진척도가 시민과 기업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※ 2009년 이후 62%의 기업들이 '비공식 지급'에 대한 요구가 호전되었다고 하였음 (2012년 World Bank: 물류성과지수(LPI : Logistics Performance Index))

< 가장 부패된 기관 조사 2005년 및 2012년 >

구 분	2005년	2012년
1	토지 및 부동산기관	교통경찰
2	관세/수출입 관리기관	토지행정부 (기존 토지 및 부동산기관; 2005년)
3	교통경찰	관세기관
4	공공재정부 및 세무기관	건설기관
5	건설 산업 관리/단체기관	교통부(공무원 및 시민) / 광물자원관리부(기업)

출처 : World Bank

* 상기 설문(1차; 2005, 2차; 2012)에 동일한 항목이 주어졌음

< 결론 및 해결책 >

①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

□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

-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가장 효율적인 부패 해결 수단.
- 정보 공개와 관련한 많은 법률이 있지만(30여개), 정부 기관의 책임을 규율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따름.
- 2009년 법무부에서 '정보 접근에 관한 법률' 초안을 제시했으나 아직 국회의 승인이 필요.
- 이 법률이 성공적으로 통과 시,
 - ①. 정보 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 명확해 짐
 - ②. 법률 시행기관과 체계가 마련되어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 가능
 - ③.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가 아닌 이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대로, 베트남의 현대화에 기여

□ 토지 관리에 관한 체계 확립 및 부패 방지

- 설문 결과, 토지와 관련한 부패가 교통경찰의 비리와 함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뽑힘
- 토지 부패라 하면, 토지사용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은돈 지불을 비롯해서 토지의 배분, 취득, 운영에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칭 함
- 토지사용증명서 발급, 토지 배분 및 취득, 보상, 이주의 전 과정에 있어 부패가 만연해 있음
- 토지에 관한 많은 결정들이 구 혹은 성 단계에서 투명성이 보장 되지

않은 상태로 내려짐

-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법에 다음과 같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함
 - ①. 민간사업 진행 시 강제적인 토지취득 관습 제거- 상업적 사업 시, 토지 사용자와 투자자 사이의 합의가 공공 기관의 권한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
 - ②. 토지의 시장 가격 도입- 민간 부문이 독립적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해서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패와 갈등의 씨앗이 줄어들 것
 - ③. 투명성 확대- 투자자가 지불한 토지세와 같은 토지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한다면, 토지와 관련한 부패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

□ '이해의 충돌' 해결을 위한 기관 설립

- 부패와 관련해서 '이해의 충돌'이란, 공무원이 공무원의 권한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 하는 경우를 가리킴
- 2005 부패 방지법에는 개인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, 국가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부패라고 정의 하고 있지만 '이해의 충돌'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
- 예를 들어, 가족 중에 선생님 혹은 공무원이 있는 경우, 24%의 부모가 입학과 관련하여 뇌물을 줬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, 이를 어떻게 처벌할 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
- 성의 표시의 선물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
- 공무원들이 행정 관련 결정을, 이익집단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
- '이해의 충돌'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, 법이 재정된 이후에는 감시 기관의 역할이 중요

□ 자산, 소득 신고 체계 확립

- 자산, 소득 신고 공공화의 필요성
- 소득, 자산뿐만 아니라 이자, 임대료 또한 공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, 이익 집단과 정책 수립자들의 유대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언론이 견제할 수 있음
- 효율적인 자산, 소득 신고 체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
 - ①.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수의 문서 파일 프로그램
 - ②. 좋은 자료 관리 체계
 - ③. 자산,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제 조치
 - ④. 자산, 소득 신고 내용을 공공에 공개
- 만일 자산, 소득 신고의 의무를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한정 지을 경우 관련 문서 관리가 더 수월해 질 것이고 신고 체계가 더 효율적일 것임

□ 행정 절차 간소화

- 행정개혁이 실제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
- 상당수의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피하고 사업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검은돈을 지불
- 법적 기틀을 꾸준히 투명화해 공무원들이 그들의 권한을 이용해 자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

□ 언론의 기능 강화

- 언론이 보도 하는 정보의 질과 양을 개선함으로써, 정보 수집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 사건을 더 많이 드러낼 필요가 있음
- 오보의 책임을 형사책임 영역이 아닌 민간책임의 영역으로 포함하면 언론이 부정부패를 더 적극적으로 취재 할 수 있음

② 정책 집행 강화

□ 실적위주의 공무원 사회를 통한 부패 방지

-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직원을 채용할 것
- 약 28%의 지원자들이 공무원 지원 시 금전 지급
- 객관적으로 인재를 충원 시, 부패 발생이 더 적음
- 공무원 채용과 승진 시 실적 혹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할 것

□ 내부고발자(신고자)들의 신변 보호

- 설문 조사 결과, 약 40%의 시민이 부패를 목격했을 시 신고하겠다고 답변
- 나머지 약 60%의 시민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는 신고 접수에 대한 불신 때문
-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 하고, 신고 접수 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

□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

- 설문 참여자의 약 90%가,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패에 대한 처벌 미비를 꼽음
- '이해의 충돌'해결의 필요성
- 상당수의 공무원 상관들이 집단적, 개인적 평판 때문에 부패를 공론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

③ 부패 감시 기능 강화

- 새로운 반부패 법률을 제정하고 현존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만큼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부패실태 개선 정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종합적 부패 감시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는데, 이를 바탕으로 부패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부패 감시 기능 강화에 힘써야 할 것

④ 국민의 인식 변화

- 정경유착의 폐해를 실증적으로 입증해, 기업들이 부패에 동참하지 않도록 장려
- 조사 결과, 로비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가,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평균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음
- 국민들에게 비공식적 비용(뒷돈)을 지불하지 않도록 교육
- 대중적 교육을 통해 부패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것